
관세청 업무보고

2026. 7. 15.

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^(국정과제 37-6)

- (마약·총기) 화물경로별 강화된 마약·총기 차단망*을 구축하고, 국제공조 확대와 「총기 전담분석팀('26.1월~)」을 통해 위험분석기반 강화

* 국제우편물 2중 마약저지선 구축, 여행자 신체은닉 마약 적발 강화, 특송화물 우범국화물 정밀판독 시행

- (마약) 국경단계에서 767건·1,007kg 상당 마약류 사전 차단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- ▶ (여행자) 폴란드발 여행자 수하물 속 과자제품으로 은닉 케타민 10kg 적발('26.2)
- ▶ (특송화물) 에센셜오일 위장 필로폰 7.5kg('26.4), 백색 의류 흡착 은닉 필로폰 4.5kg('26.3)
- ▶ (국제우편)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은닉 마약 연이어 적발('26.4~6월 6건 // 합성마약대마 등)
- ▶ (해상화물) 의류와 혼재(커튼치기)하여 은닉한 대마초 636kg 적발('26.3)

- (총기) 안보위해물품(총기·실탄 등) 약 9천여점 적발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- ▶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여 사제총기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인물을 선별하여 경찰청, 국정원과 합동대응단을 운영
⇒ 총기 3정, 모의총포 338정 등을 적발하고 19명을 송치('26.1월)

- (무역안보) 전략물자 불법유출,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1조 3,0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 차단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- ▶ 군용 물자인 드론과 부품품을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에는 일반 운송용 민간 드론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전략물자 비대상 판정을 받아 불법수출한 업체 적발 및 송치('26.2월)

- (외환범죄) 범죄수익의 국외 이동,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총력 대응하여 약 3조 9천억원 규모의 외환범죄 적발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- ▶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의 자금을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수익금 및 수출대금 등 지급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 검거('26.1월, 3,010억 원)

2 경제안보품목 수입 다변화 지원

- (원유) ①캐나다산 원유 도입장벽 제거를 위한 원산지증명 특례, ②미국산 원유 등 수입확대를 위한 'FTA 직접운송 특례' 신설

〈 캐나다산 원유 도입장벽 제거('26.4월) 〉

기존 (한-캐 FTA 특혜적용 곤란)	개선 (안정적 FTA 특혜적용)
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난제*로 FTA 특혜세율(3%→0%) 적용 어려움 * 선적항까지 운반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됨 → 개별 생산자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	■ 캐나다 앨버타 주 정부가 생산자 대신 원산지 증명서류 대표 발급 ■ 대한민국 관세청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FTA 적용<6월까지 816만 배럴 원유 도입>

※ 효과 : 연간 최대 3,300만 배럴 확보(기존 480만배럴의 7배)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

- (나프타) 호주산 천연가스액*(나프타 대체품)을 비축의무가 수반되는 원유 대신 석유제품(비축의무×)으로 분류하여 연간 250만톤 추가확보 지원

* ①분별증류 공정을 거쳐 ②프로판(C3)·부탄(C4)이 대부분 제거된 물품은 원유가 아닌 석유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립

3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불공정행위 근절

- (신속반출) 할당관세 품목의 빠른 국내공급을 위해 ①보세구역 불법비축 점검(952회), ②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지정(32개 품목)·부과*

* ('26.1~6월) 냉동고등어, 냉동돼지고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 324건 가산세 (4.7억원) 부과

- (특별단속) 할당관세 악용 불공정행위 특별 관세조사·수사 실시

- ①정제당 할당관세 물량 부당확보(4개社, 6.6만톤), ②육류 반출기한 위반, 열대과일 고가신고 등(6개社, 적발 4,134억 원) → 총 523억 원 추징

품 목	유 형	적발 내용
정제당	부당 확보	▶ B社 등 3개社의 태국산 설탕 1.5만톤 복수 법인 설립, 제3자 명의 사용 등 부당 확보 ⇨ 추징액 약 200억원 ▶ T社의 태국산 설탕 등 5.1만톤 부당 확보 ⇨ 관세포탈액 약 131억원
육류	반출기한 위반	▶ 농식품부 고시상 보세구역 반출기한(40일) 위반(5개社) ⇨ 적발 334억 원, 추징액 192억원
열대과일	고가 신고	▶ H社, 할당관세 적용에도 불구, 수입가격을 높여 낮은 영업이익률 유지 ⇨ 법인세 탈루(적발 200억원) / 외국환거래법 위반(적발 3,600억 원 과태료 60억원)

II. 핵심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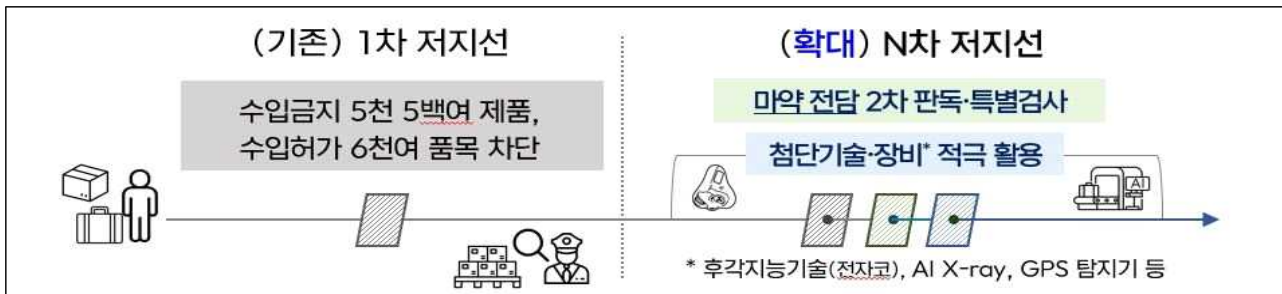
1 역점 과제

①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(국정과제 37-6)

- 국경 1차 저지선만으로 국내 압수 마약의 78%를 적발(최근 5년 기준, 마약류범죄백서)
-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경로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감시단속체계 긴요
(⁴월국제우편 → ⁶월일반화물 → ^{하반기}여행자, 특송화물, 선박·항만)

□ (N차 검사) 마약·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행자·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별로 검사·단속 체계를 촘촘하게 재편

〈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방향 〉



분야	1차 저지선	N차 저지선
국제우편	■ 세관 X-ray 판독·선별검사	■ 1차+ ² 차 5개 우편집중국 2차 판독·검사
일반화물	■ 수입화물 검사(모든 불법유형)	■ 1차+ ² 차 입항 즉시 검사, ³ 차 마약특별검사
여행자	■ 기탁수하물 X-ray 전수 판독 ■ 우범여행자 신변·소지품 선별검사	■ ² 차 기탁수하물 X-ray 전수+복수판독(우범항공편) ■ ² 차 우범편 도착 즉시+입국심사 직후 핸드캐리 일제검사
특송화물	■ 한 차례 X-ray 전수 판독	■ ² 차 X-ray 전수+복수판독·검사(고위험물품)
선박·항만	■ 선박·선원 선별검사	■ 항만 우범출입자·전과자 등 위험인물 입수정보를 토대로 ² 차 실시간 추적·감시, ³ 차 게이트 출입통제·검사

□ (수사 단속) 국경에서 마약 공급자(해외)와 수요자(국내)를 양방향 동시 타격할 수 있도록 수사 인프라를 보강하고, 국제 합동단속 강화

- 우범자 선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*을 구축하고, 현장수사 인력 확충**을 통한 마약 사건 ‘골든타임’ 확보

* 적발정보, 외부정보, 국제동향 분석 결과 기반 우범지표 마련 → 쏠 반입 경로에 통합 적용

** 마약정보전담팀 신설 및 수사팀 보강 추진, 강력 사건 대응 무도 특채 채용 등

- 합동작전 대상국을 확대*(5→10개)하고, 국제 유통조직 공조수사 강화

* (현행) 태국, 베트남, 네덜란드, 말련, 미국 + (확대) 캐나다, 캄보디아, 라오스, 프랑스, 독일

② 우회수출·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무역안보 수호 (국정과제 37-6)

- [관세] 국산둔갑 우회수출의 주된 목적은 ①수입국의 고관세와 반덤핑·상계관세 회피, ②수입규제 회피 및 ③K-브랜드 프리미엄 차익 획득 등
- [기술] 국가 핵심기술 체화 장비 등 해외 불법유출을 차단하는 국경단계 최후 저지선 역할 수행, 이차전지 등 첨단물자를 포함한 전략물자 1,806개, 상황허가 1,427개 품목 수출 통제

□ (우회수출)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응한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*를 구축하여 우회수출 위험징후 선제 포착·집중 단속

* 수출입데이터와 국세청 세적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수출업체 세탁 등 우회수출 요인 도출

□ (기술유출) 美 산업안보국 등 해외 당국과 협력하여 고성능 AI서버 등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·방산기술의 불법 국외 유출을 차단

※ 한국 관세청의 정보공유 노력과 우수한 단속 성과로 美 CBP 감사서한 수신('26.6.)

③ 무역기반 재정·금융범죄(TBFC*) 엄단 (국정과제 37-6)

- Trade-Based Financial Crime: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조작 등 부정무역행위를 통하여 정책자금 편취, 부정조달, 자본시장 교란 및 사기 등 경제범죄를 유발하는 행위

□ (정보협업) 정부지원사업, 공공조달·납품, 주식상장 정보 등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를 총괄 수집·분석하는 '통합정보 활용체계' 구축

□ (단속강화) 불법 무역을 통한 ①정부지원금 부정수급, ②공공조달 부정납품 등 국가재정 편취행위, 주가조작 등 ③자본시장 교란범죄 집중 단속

< TBFC 주요 유형 >

	수 입		수 출	
무역 기반	[유형1] 수입가격 고가조작	[유형2] 저가 외국산 물품 수입	수출금액 부풀리기	
	↓	↓	[유형3] 지원요건 허위구비	[유형4] 허위 매출계상
	지급기준 부풀리기	원산지 국산 둔갑	↓	↓
범죄 행위	공적급여 과다수령	공공조달 부정납품	정책자금 부정수급	주가조작·부정상장

※ 정부지원사업·공공조달·주식상장 정보 입수·분석 → 부정수급·조달·자본시장 교란 의심업체 단속 → 정보 공유로 이어지는 관세청 'TBFC 종합 방지도단속 체계' 필요

* ㉞ 중기부 산업부 등 정부지원 수혜+조달청 공공조달 낙찰 정보 → 관세청 혐의업체 단속 → 사업기관·국세청 결과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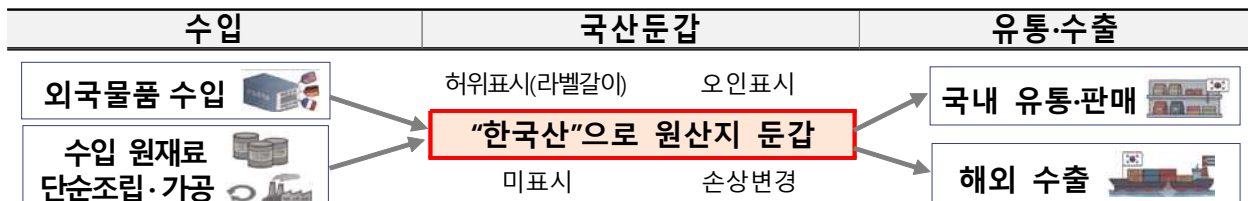
4 K-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확대

- 수입품의 국산둔갑 유통과 저가신고로 통한 탈세 행위로 시장의 공정경쟁이 왜곡
→ 선량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산업 고사 위기 →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
- K-브랜드 위조품은 외국에서 제조 및 외국간 수출입되어 국내 공권력 행사가 제한적
→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

□ (원산지 둔갑) 단속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업 보호로 전환, ①저가 수입품 국산둔갑, ②수입 원재료를 단순조립·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단속 확대

※ (한국철강협회) “최근 저가 수입 철강재를 국내에서 절단 등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단속 강화 절실”

〈 원산지둔갑 발생과정 및 대응방향 〉



※ 품질 경쟁력 높은 선량한 국내 제조산업 피해 극심

→ ‘지자체-생산자 단체’와 피해 업종을 발굴하여 3자 협업형 ‘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’ 구축

※ 수입-국내 유통-수출 쏙 단계를 아우르는 ‘원산지표시 단속 전담체계’ 구축 필요

□ (탈세 행위)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해 세액을 탈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* 기획 관세조사 실시

* ㉠ A업체는 1만원 상당의 외국산 공구를 2천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8천원에 대한 세액 탈루 후, 시중 판매가격을 낮춰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

□ (지재권 침해) K-브랜드 침해물품의 글로벌 유통과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세관당국 간 협력으로 현지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, 합동단속 전개

○ 대표단 파견·지재권 양자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현지 지재권 보호 등록*을 추진하고, 외국 세관직원 대상 K-브랜드 정품 식별법 교육

* 해외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기관에 지재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

○ 가품 제조 고위험국* 세관 당국과 생산시설 원점타격 등 특별합동단속

* 해외 K-브랜드 단속·피해 정보를 수집해 “K-브랜드 피해지도” 작성·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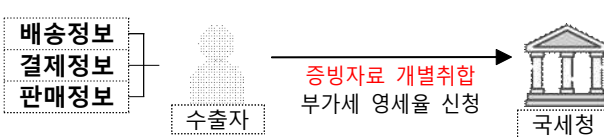
○ 가품 유입 주요 경로인 온라인 플랫폼에 세관 보호 대상 K-브랜드 정보를 공유하고, 신속한 위조상품 여부 판정을 위한 AI 식별기술 도입

5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'모두의 수출' 생태계 조성

-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수출 외에도 개인·영세업자·내수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통로 다각화, 수출기업 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 필요
※ 반도체 호황, 주식시장 성장 등 성과가 탄 세상이야기라는 일부의 소외감에 신경써야... (V 말씀, 6.23.)

□ (역직구 활성화) 전자상거래 수출이 개인·영세업자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'역직구 종합 지원대책' 수립·시행

〈역직구 기업 세제부담 완화 방안〉

현 행	개 선
①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간소화 	
② 목록통관 수출품 관세환급 허용  ※ 목록통관: 통관목록 제출로 정식수출신고 생각하는 통관방법 ('25년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건 중 65% 차지)	

- ①주요 인접국과 해상특송 협력*을 통한 통관·운송비용 절감, ②각종 세금 환급 간소화, ③통관데이터 기반 실효적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** 개발

* 한·중 해상특송 본격 시행('16) → 한·일 해상특송 확대('25) → 인접국 신규시장 확대('26~)

** 現) 데이터서베이 기반 B2C 중심 통계 → 改) 관세청 통관데이터 기반 B2C·B2B 반영 통계

□ (수출기업화 지원)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,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으로 수출 중단기업 재수출 진입장벽 완화

- 내수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에 근거해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①수출 표준품명제도 도입*, ②창업기업 대상 수출 코칭 서비스** 제공

① 주요 수출품의 세번을 세분화하여 통계 관리 (예) 2008.99-5010 김 → 01. 조미김, 02. 구운김 등)

② 무역통계정보포털(무역통계진흥원)을 통해 수출역량 진단, 유망시장 추천 등 맞춤형 정보제공

- 중고차의 차대번호 기반 원산지확인 체계를 구축*하고, K-뷰티·푸드의 원산지 간편인정을 확대하는 등 유망 수출품의 수출 판로 개척 지원

* (현행) 완성차 제조사 발행 '원산지확인서' 의무 제출 → (개선) '차대번호(국내제조사실)'로 원산지확인서 대체, 국토부 자동차 이력정보와 연계하여 세관이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

6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지원

-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*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세제도, 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책을 총동원하여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
 - * 호남권반도체 팹 공장 건설, 충청권반도체 패키징 거점 육성, 영남권피지컬AI·배터리 투자 등

□ (전담조직) 전국 거점 세관에 신설된 ‘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’을 통해 평택(반도체), 새만금(로봇) 등 5극 3특 지역특화 첨단전략산업 밀착 지원

- * ①수도·중부권(평택 원스톱 지원팀, 서울·인천 지원반), ②동남권(부산 지원반), ③대경권(대구 지원반), ④서남권(광주 지원반), ⑤강원·제주권(속초·제주 지원반)

□ (지원체계) 보세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공장 건설부터 제조·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 확대

〈첨단산업 단계별 주요 지원방향〉

첨단전략단지 건설단계		제조 및 수출단계		사후지원 단계
• 건설시설 ‘보세건설장 특허’, 산업단지 ‘종합보세구역’ 지정 •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기계·설비 설치 + 건설용 외국장비 사용	→	• 24시간 수출입통관 지원 • 제조시설 ‘보세공장 특허’ •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·가공하여 수출	→	• 대외 관세 리스크 맞춤 컨설팅 • AEO 인증 획득 지원 • 규제 개선사항 상시 발굴

7 물가·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

- 미국-이란 전쟁 등 국제질서 격변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저성장·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,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물가·환율 안정 대응 시급

□ (물가 안정) 할당관세 악용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,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공급 다변화 지원

- ①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반출·유통 유도*를 위한 현장점검·수사단속 강화, ②통관단계부터 매점매석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- * 추천기관(농림부·해수부)과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,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, 반출명령 신설

-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북미산 원유·호주산 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련산 원유 FTA 규제를 혁신(C/O발급 180→60일)하고, 신규 지원 품목 지속 발굴

□ (환율 안정)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고환율 장기화 기조에 편승한 불법외환거래*에 적극 대응하고, 자본거래 대상 외환 검사 강화

- * 예 환율 추가상승을 예상해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며 신고 없이 부동산 등 투자

※ 세관신고액과 실제 무역대금간 편차가 큰 업체 대상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

8 외국인 여행객 관광 소비 활성화

- 외국인 관광객이 '26.6월 기준 역대 최초 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산업 성장 지속
→ 관광 수요가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입국편의 개선 + 면세점 활용책 마련

□ (입국편의 제고) 여행자가 세관·출입국·검역 기관에 각각 제출하는 신고 정보를 QR 기반으로 **통합·일원화***하여 **방한 외국인 신고 편의 제고**

* (일본) 하네다 등 일부 공항에 입국심사세관신고 통합 키오스크 도입, 단일 QR로 원스톱 처리

□ (관광소비 활성화) 방한 외국인의 중소기업·지역 **국산제품 구매 기회를 확대**하고, **내국세 환급 절차를 개선**하여 방한 관광 소비 활성화

- 온라인 입점 국산품에 대해서도 시내면세점 **현장인도를 허용**하고, 면세점 내 **지역 상품 연계 팝업존***을 **운영**하여 K-브랜드 쇼핑여건 개선

* 지방정부 참여 공공 캐릭터 상품 전시 확대 + 캐릭터 연계 굿즈 판매

- 시중 구매 물품에 대한 **환급절차 간소화**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반출확인용 무인기기를 **확대 설치***하고, **즉시환급 체계 개편**

* (현행) 총 66대 운영(인천 52대, 제주 5대, 김포 6대, 김해 3대) → (확대) 전국 공항만

9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AI 대전환(국정과제 24-1)

- '농업→산업→정보혁명'에 이어 'AI 혁명' 급부상, AI 강대국 진입을 위해 관세행정 인공 지능 전환(AX) 긴요 ※ (관세청) 방대한 관세무역데이터 + AI 인재 + 정보인프라 보유

□ (AI 대전환)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AI ISP 기반의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, 당면 현안은 ICT 인재를 활용한 **자생적 과제 개발**로 적기 대응

- AI 관점에서 관세행정 업무, 시스템 전 분야의 **전면적 혁신**과 **생성형 AI 기술 적용 확대**를 위한 'AI ISP' 사업 조기 완수

- 국경관리기관별 **위험정보의 연계·분석**이 가능한 '**부처 협업형 AX 과제**'를 개발하고, 통관·관세조사 **지능화**를 위한 **AI 접목 확대***

* AI 통관 agent(위험화물 선별통관 결정 자동화) / AI 관세조사 시스템(납세데이터 요약·분석)

- **현장직원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 홍보·확산**을 위한 '**AX 챌린지***' 개최

* ('26년 우수사례) 사진 한 장으로 막아내는 해외불법 식의약품, 무역외환 범죄 자동 추적 등

2 국가정상화 과제

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응

-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한 고액·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 뿐만 아니라 70조 원에 달하는 국세·지방세 위탁 체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등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
※ 체납자(관·국·지방세) 입국현황 : ('23) 9,873명 → ('24) 12,693명 → ('25) 12,702명 → ('26.5월) 5,243명

□ (**고액·악성 체납**) 관세*, 국세·지방세** 체납자의 고의적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통관 제재 강화, 은닉재산 추적 등 **빈틈없는 징수 로드맵** 가동

* 관세 체납자(백명)/체납액(조원)/징수율(%): ('24) 25/2.08/5.1 → ('25) 28/2.14/6.1

국·지방세 체납자(만명)/체납액(조원): ('24) 7.3/52.9 → ('25) 9.1/61.7 → ('26.5.) 10.1/70.2

- 체납자 입국 시 검사율 상향, 주요 공항 전용 검사대 운영*, 휴대반출입 외화 강제징수, 면세 혜택 제한 등 **강력한 패널티 부과 조치** 단행

* 인천공항(5월), 김포·김해·청주(7월) / 일반 여행자 대비 검사율을 10배 이상 대폭 상향

-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**상한액**(최대 10억 원)을 **폐지**하고, 국·관세 공동 체납자에 대한 부처 간 **공조·합동 가택수색** 실시

② 전자상거래 통관질서 확립

-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적기 대응함과 동시에, 사회문제로 떠오른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과 불법 식·의약품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

□ (**통관질서**) 탈세, 위해물품 불법 반입,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전자상거래 악용행위 차단을 위해 '**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**('26.8월)' 구축

- 국내외 주요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주문·상품·공급망 등 **거래정보** (63개 항목)를 **사전에** 입수하여 해외직구 악용 행위 **상시 모니터링***

* ㉠ 상업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빈번 반입하는 합산과세 대상 건 선별·심사 강화

-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신고서 정보를 토대로 **위험관리를 고도화**하여 **안전성 구매 검사***, 해외직구 악용사범 **특별단속** 등에 적극 활용

* ㉠ 어린이용품, 장신구, 의류, 식품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 분석

-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'**일회용 인증번호**' 검증 체계 도입